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88
----------	-------

발의연월일 : 2023. 8. 7.

발 의 자 : 이태규 · 윤창현 · 최연숙
김희곤 · 이종성 · 박덕흠
엄태영 · 지성호 · 이명수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 되는 등 학교 교육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원의 수업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비용부담 관련 업무를 관할청(교육감)이 시·도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부여 및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한 경우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

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학급교
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하려는 것
임(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절차”를 “절차, 사무의 위탁”으로 한다.

⑥ 관할청은 제5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제목 중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

고,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청은 제5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6항----- ----- 절차, 사무의 위탁 ----- -----.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u>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u>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u><신설></u>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 ----- <u>교육활동 침해행위를</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침해행위---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
----.

② ----- 교육활동보호센터 -----

-----.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⑨ (생략)</p>	<p>-----</p> <p>-----</p> <p>-----</p> <p>-----</p> <p>-----.</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	---